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망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음 6월 9일)

제18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 도청 접견실에서 실·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가졌다.

文 정부 국정과제 적극 대응

도, 신규사업 지속 발굴·핵심 사업위주로 전략 마련키로
송 지사 "현 정부서 가시적 성과 창출, 적극 대응해야"

전북도는 지난 28일 오전 송하진 지사 주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격 운영 등 5개 전북 공약 사업과 무주태권도원 성지화, 친환경차 산업허브 구축(전북·상용전기차), 지역특화 관광명소 육성 등 11개 연관 사업 등 16개 사업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립될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국가 예산 확보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세부 논리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TF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

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정과제와 연관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핵심·쟁점 사업위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사업 및 현안 사업은 정부기연발에 수립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우리도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면서 "관계부처에서 마련 중인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과 국가예산에도 전북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이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반영돼 있다. /김진성 기자·인재용 기자

조희연 전북청장 유임 결정

조희연 전북지방경찰청장(사진)의 유임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치안감의 승진 및 전보 내정자를 발표결과 조 청장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유임했다. 조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 2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 정보 2과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내고 작년 11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이상민 기자



국민안전처,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전북도 도민안전실 존폐 '관심사'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폐지함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 돼 있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부서도 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가 의결 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하고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긴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지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재난안전실 또는 도민안전실로 각 시·도에 설치된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설립하면서 각 시도에 '안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전북도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했고, 현재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로 나누어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안전담당 자치행정국 등 기존 국·실로의 업무이관
국민안전처 설립 당시 가이드라인 수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부서 폐지 불가도, 가이드라인 해제 건의중
폐지시 일자리 부서 강화할 듯 '기능은 이어가야' 목소리도

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세부 계획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지만, 도민안전실을 폐지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민안전실 폐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서는 폐지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북도민안전실이 신설된 후 각종 정책을 펼쳐 도내에서 안전사고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4대 분야(교통·화재·자살·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이 풀어야 하면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안전실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7월 도내 기업들 체감경기 부진 '여전'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실시지수 지난달보다 하락... '내수부진' 이 주원인

7월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월 업황 전망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 7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 실시지수(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72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업황 BSI 역시 전월(70)보다 1포인트 하락한 69로 조사됐다.

BSI는 기업들의 현재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7월 제조업체의 경영 애로는 내수부진(32%), 불확실한 경제상황(13.26%), 인력난·인건비 상승(10.6%), 경쟁심화(10.0%), 수출부진(6.8%) 등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23.8%), 인

력난·인건비 상승(15.2%), 경쟁심화(15.0%), 불확실한 경제상황(14.4%)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8월 중 업황 전망도 제조업이 69로 전월(83)보다 14포인트 하락하고, 비제조업이 70으로 전월(75)보다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2~21일 총 440개 업체(420개 업체 응답)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3면	- 민주당 '당 혁신기구' 구성	4면	- 행정구역 조정 놓고 투표 논란	6면	- 카카오뱅크, 금융시장 돌풍 몰까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